2017년 업무계획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

2017. 1. 9

환경부

1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

4대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

1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1. 미세먼지 감축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3. 선제적 녹조 대응
4. 지진 및 기상 예·경보 고도화

2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1. 소음·악취·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2.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3.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4. 친환경 소비·생활기반 구축

3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
2.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
3.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4. 노후 환경 인프라 현대화

4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환경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
2.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
4.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2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과제1]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차량 2부제** 등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 **살생물제 관리** 등 화학물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이행 지원**

① 미세먼지 감축

□ 발생원인 규명 및 예보체계 혁신

○ 국내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대폭 확충***하고,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PM2.5(개소) : ('16.5월)152기→('16.12월)191기→('17.12월)287기
** 항공·위성·지상·해상에서 3차원 입체관측('16.5~6월, 미국 NASA 참여)

○ 경보기준 일원화* 등 미세먼지-황사 예·경보제 통합, **인공지능**(AI) **활용 예보모델 시범운영** 등 예보체계 고도화로 예보정확도 제고**

* 미세먼지 주의보(150)→미세먼지 경보(300)→황사경보(800㎍/㎥)
** "나쁨"이상 고농도시 예보정확도 '16년 63%→'17년 70%

□ 국내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 **(에너지상대가격)**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거쳐 조정방안 마련('17.8월)

* OECD 평균('14년) 100:93:53, 우리나라 100:85:50('05년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된 이후 해당수준 유지중
**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발전)** 건설 또는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배출기준 대폭 강화***, 발전소 **밀집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 추진**

* 건설 중 9기는 최대 5배 강화('17.2월), 가동 중 39기는 기준(안) 마련('17.6월)
** 지자체와 협의하여 충남권(당진·태안·서산 등) 지정 추진

○ **(산업)**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도입방안** 마련('17.3월), 수도권 **대기총량제 할당기준 강화***('17.10월)

* 제3차 할당기간('18~'22) 기준배출량을 과거 6년 최대에서 5년 평균값으로 변경 등

○ **(경유차)** 노후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서울시 전역), **조기폐차 지원** 확대(4.8만대→6만대), 제작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인증제**** **시행**('17.9월)

* '05년 이전 출시차량 중 정기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 실도로 배출가스(질소산화물)를 실내인증기준의 2.1배 이내로 규제

○ **(도로 비산먼지) 살수식·진공흡입식 청소차** 보급 확대(32대→112대), 주변 토사의 도로유입 방지를 위한 **도로 설계기준 변경**('17.12월)

□ 중국 등 동북아 협력 강화

○ 한·중 공동연구단('15.6~) 중심으로 베이징 등 중국 동북부지역 **대기질 공동관측 및 연구*** 착수('17.4월)

* 대기성분 측정·분석, 항공입체관측, 모델링 평가 등('17~'20)

○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를 현재 중국 베이징 등 35개 도시('15.12월~)에서 **74개 도시**로 확대('17.4월, MOU 체결)

○ **한-중 공동연구단, 한·중 환경장관회의** 등 원인규명 및 저감을 위한 대중국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다자협의체*** 등에도 **의제화**

* EANET(월경성 산성강하물, 13개국), LTP(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 고농도 상황 발생시 비상 저감조치 시행

○ 고농도 지속시*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 사업장 **공사중지·가동률 조정** 등 비상조치 마련·시행('17.2월)

○ 취약계층별, 시설별 대응요령을 구체화한 **취약계층 보호 미세먼지 매뉴얼*** **개정·배포**('17.1월) 및 일선기관 교육·홍보(~'17.6월)

* 야외수업 중지, 휴교 권고 등 포함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유통제품 조사·퇴출)

○ **함유물질 전 성분 공개,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등을 위해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9개소)와 **자발적 협약** 체결('17.2월)

※ 정부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명명법·공개범위 등) 제공, 위해성평가 지원

○ 화학물질 인체 노출 우려가 있는 **공산품·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17.6월) **문제제품 공개 및 리콜조치**(~'17.12월)

* 위해우려제품(15종) 및 공산품(4종)(~'16.12월), 공산품·법정비관리제품(~'17.6월)

○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해우려제품을 추가 지정**하고(18종→22종) **안전기준**에 **미세플라스틱**(직경 5㎜이하) **사용 제한규정** 신설('17.10월)

□ 살생물제 안전관리 강화(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과 같은 **살생물질***은 그 양과 관계없이 정부가 위해성을 평가하여 **사용 가능물질을 사전에 승인·고시**

*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과 같이 미생물·해충 등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EU기준 1,000여종)

※ 신규물질은 출시 전, 기존물질(유통 중)은 승인 유예기간을 최대 10년 부여

○ **살생물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승인받은 살생물질만 사용하고, **제품의 안전성·효능·표시사항** 등을 **허가***받도록 의무화

* 정부가 허가하는 경우 제품 사용법·사용량, 사용자의 범위, 부작용, 유통기한 등 허가조건 설정(무독성·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 금지)

□ 화학물질 유해성 관리 강화(제조·수입)

○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약 7천종)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1톤 미만**이라도 위해우려 물질은 **등록대상으로 지정**

* (현행) 등록대상을 3년마다 지정→(변경)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

○ 위해성 평가를 거쳐 발암성·고잔류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허가·제한물질에 추가**(('16)72종→('17)75종)

* (예시) 벤젠(발암물질), 비스페놀A(내분비계 장애물질), DEHP(가소제)(생식독성물질)

- **허가물질*** 안전관리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전환**하고, **제한물질**을 금지된 용도로 사용시 **처벌**('17.5월 화평법 개정안 국회제출)

* (현행) 원칙**허용**, 특정용도는 허가 후 사용
(개선) 원칙**금지**, 특정용도는 허가 후 사용, **면제용도 지정(허가없이 사용)**

□ 화학물질 취급현장 안전관리 강화(유통·취급)

○ 유해화학물질 양도·양수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유해성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전달**('17.5월 화평법 개정안 국회제출)

* 현재는 정부에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만 하위 사용자에게 정보제공

○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른 **분류표시***(위험종류에 따른 유해·위험문구 표시)를 확대하고, 등록완료 **물질 정보공개**('17년 1,000종)

* (누적) ('14)1,700종 → ('16)2,006종 → ('17)2,108종 → ('24) 3,400종(EU수준)

○ 화학물질 **수입 통관검사*** 확대, **항만 내 보관규정**** 마련('17.6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사이버감시단 50명) 등 관리사각지대 최소화

* 인천공항·인천항·부산세관('16) → 평택항·양산세관 추가('17)
** 72시간 내 반출, 장기보관시 별도구역에 실외 저장소 마련, 관리자 선임 등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 **폐 질환**의 경우 '16년까지 접수된 3·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1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완료*

* 3차 신청자(587명) 중 208명 판정('17.1월), 4차 신청자(3,999명) 중 1,052명 판정('17.4월)
※ 피해 조사·판정기관을 1개소(서울아산병원) → 10개소 이상으로 확대

○ **폐 이외 질환**의 경우 독성실험 등을 거쳐 **태아**('17.1월), **천식**(17.4월 목표) 등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

* 폐 이외 질환 검토委('16.5월) 및 태아피해 판정기준 마련 소위 구성('16.11월)

○ 1~2단계 판정 피해자 가족, CMIT/MIT 함유제품 사용자 중 질병이 있는 경우 등 **4단계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추진('17.1월~)

* 1~3단계 피해자의 경우 폐 이외 장기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시행 중('14.7월~)

○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환경보건센터 **전문인력** 확충(4명→전문의·심리상담사 등 8명)으로 소아놀이치료, 상담 등 확대('17.6월)

* 인터넷 접수, 검사·판정 진행상황 알림, 지원금 신청 등

③ 선제적 녹조 대응

□ 하천녹조 발생 원인 규명 및 수생태계 조사·평가 착수

○ 조류발생 영향인자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16.5월~, 낙동강·영산강)을 지속하고 조류(종) 확보·배양·보관체계(조류은행) 구축

○ **4대강 보 구간** 생태계 **조사지점 확대**(36개→56개) 및 **낙동강 중·하류**에 조성된 **생태공원 등에 대한 조사·평가 착수**('17.4월)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20억원), 생태공간 조사·평가(11억원)

○ **폐광산, 산단 주변하천** 등 오염우려지역 23개소* 정밀조사('17.1~10월), **오염된 퇴적물**에 대한 **평가·관리절차**[**] 마련('17.7월)

* 폐광산 20개소, 석면광산 2개소, 하천 1개소(삼척시 가곡천)

** 퇴적물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절차, 오염방지 및 복원계획 수립절차 등

□ 녹조 발생 사전 예방 및 감시

○ 녹조 우심기간(5월~9월) 하·폐수 처리시설의 **녹조 원인물질(총인) 처리강화지역 확대***

* ('16) 한강·낙동강 중·하류 → ('17) 한강·낙동강 상류 및 금강수계 추가

○ 평시에 **댐·보·저수지에서 확보한 유량**(환경대응용수)을 녹조 발생 시기에 일정기간(7일 이상) **연계 방류***하여 조류발생을 억제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규정 마련('17.4월) 및 연계방류 실시('17.6월)

○ 가축분뇨·하폐수처리장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17.4월~)

□ 고농도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

○ 대규모 기업형 축산농가 증가추세에 맞춰 축사 규모와 상관없이 설정된 **방류수질 기준**을 **규모에 따라 강화**하는 방안 마련('17.7월)

* (현행) 시설유형별(공공·개별), 지역별(특정지역, 기타) 구분 → (개선) 규모별 기준 추가

○ 가축분뇨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사바닥 및 분뇨저장조 등의 설치기준** 마련('17.10월)

○ 가축분뇨 퇴비·액비로 화학비료 대체 등 비료양분 투입을 농경지 양분 요구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추진**('17년~)

* 시범사업(논산·김해·군산) 추진 및 평가(~'17.12월), 사업 확대 및 제도화('18년~)

□ 녹조 상황 하에서도 먹는물 안전 보장

○ 한강·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율** 제고(('16)56.9%→('17)60.3%)

* ('16) 33개소 → ('17) 35개소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58개소 中)

○ 정수장 사전 모의훈련*('17.5월) 및 맞춤형 특별 기술지원실시('17.4~6월)

* 조류 경보 단계별 모니터링, 활성탄 중간염소 주입 등 우수사례 현장 실습

○ **정수장 수질감시항목**(26→28종)을 확대하고 **소독부산물**(총트리할로메탄, 알루미늄 등)을 저감하기 위한 우수사례 **운영기법 적용**('17.6월~)

※ 주요 정수장의 약품사용량, 소독부산물 저감 우수사례 운영기법 발굴('17.5월)

④ 지진 및 기상 예·경보 고도화

□ 지진정보 통보시간 단축 및 전달체계 개선

○ **지진관측망 보강*** 및 **지진조기경보**(규모 5.0이상) **시간 단축****

* ('15) 150개소 → ('16) 156개소 → ('17) 210개소

** (기존) 관측 후 50초 이내 → (개선) 관측 후 15~25초 내외

○ 지진문자 송출 전용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전달체계 다양화****('17.11월)

*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소요시간(규모 5.0이상) : 8~10분('16) → 1분 이내('17)

** 방송(TV, 라디오 등), 온라인매체(SNS 등), 유관기관 시스템 등 활용

□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이상기상현상 예측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현업용) **개발 착수**('17.1월) 및 특이기상 연구센터* 지정·운영('17.5월)

* 장마·폭염 분야 장기집중 연구를 위해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2개소 지정

○ 예보업무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진단 실시 및 예보체계 개선**

※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예·특보 체계, 예보역량 정밀진단('17.6월), 인사제도 개선 등

○ 위험기상 조기감시 강화 및 관측공백 최소화를 위해 **첨단 관측장비**(차세대 기상위성, 기상레이더, 기상항공기, 기상관측선 등)를 **도입·활용**

* 차세대 위성 시간해상도 향상 : 한반도 주변 8→2분, 아시아 15→2분 간격 관측('18~)

**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최첨단 이중편파레이더로 교체 완료 : 총11대(~'19)

□ 가뭄·폭염 맞춤형 정보 제공 확대

○ 선제적 가뭄 대응 강화를 위해 **가뭄 예·경보제 정식 운영**('17.1월)

* 국민안전처·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합동으로 가뭄 예·경보제 실시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대상(노인, 어린이 등), 환경(작업장, 농촌 등)에 따라 세분화된 **폭염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17.5월)

* 노약자·어린이 등 계층별로 5단계의 차별화된 폭염지수 및 행동요령 제공

[과제2]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먹는물, 실내공기,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의 안전과 쾌적함**을 더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 조성**

① 소음 · 악취 · 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

□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환경 조성

○ 수서발 SRT 등 교통망 확대에 따라 **교통소음·진동 측정망***을 확충하고 소음현황 및 노출인구 파악을 위해 **소음지도 작성****

* 측정망 개소수 : 철도소음 ('16)35→('17)41, 도로진동 : ('16)34→('17)46

** 소음지도 작성 지자체(누적) : ('13)5개소 → ('16)9개소 → ('17)12개소

○ 교통소음의 85%를 차지하는 타이어에 대한 **소음 성능표시제**(자율표시제*) 도입('17.9월)으로 **저소음 타이어 보급 추진**

* 제조·수입사(8개사)와 시범사업('17.9월) 실시 후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 **층간 소음 이웃사이서비스**('14.7월 전국시행) 강화* 및 냉장고·에어컨 실외기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저소음 표시제 확대**('17.12월)

* 방문 서비스 건수(누적) : ('13)2,620 → ('15)4,712 → ('16)5,050 → ('17)5,200

□ 생활주변 악취 저감

○ **정화조·하수도**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사업***('17.1~10월)을 실시한 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반영, 전국단위로 **확대**('18~)

* 낙차방지 유도, 오·우수 분리벽 등 악취저감설비 설치(서울·대구 등 18개소, 국고 14억원)

○ 수집·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비산·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전면 교체**('17.1월~)

* 청소차,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등 수거·운반차량 약 57천대(의무화)

○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 시설기준 및 악취배출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17.10월) **친환경축사 모델 보급**[**](농식품부 협업)

* (현행) 개방형 → (개선) 밀폐형 ** 축사 현대화 사업과 연계('17년 750개소)

○ 단독주택 등에서 재활용품이 생활폐기물과 혼합·방치되지 않도록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 설치현황 및 계획(누적) : ('15)111개소 → ('16)284개소 → ('17)447개소

□ 석면 및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 **실내 건축자재**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제도 시행('17.1월)

* (관리대상) 페인트·접착제·벽지 등 6종 (관리물질)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등 3종

○ **전국 지하역사**(346개소) 대상 **석면제거사업**[*] 마무리 및 **라돈**노출에 취약한 **1만가구 대상 실태조사** 추진('17~'18)

* 석면 제거 역사(개소,누적) : ('13)89 → ('15)329 → ('16)340 → ('17)346

○ 취약가구, 어린이집·양로원 등 총 **1.4만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유해물질 검출여부** 등 무료진단 서비스 실시

※ 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천가구,누적) : ('13)3.4 ('15)40.9 ('16) 58.3 ('17)72.3

②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 생태계가 공존하는 깨끗한 도시공간 조성

○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지속 추진**

* 자연마당(누적) : ('16)8개소→('17)12개소 ** 생태놀이터(누적) : ('16)46개소→('17)73개소

○ **멧돼지 도심출몰 관리 시범사업**[*]('16년, 북한산)을 **경기도**(양주·의정부 등)로 확대하고, 전국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확대(33→50억원)

* 포획목표(50마리) 초과달성(68마리), 펜스 설치 후 도심출몰 50% 감소(36→17회)

□ 생태하천 복원 지속 추진

○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된 도심 등의 지류·지천을 본래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13~'17년간 총 540㎞)

* '13~'17년간 복원실적(누적) : ('13)104㎞, ('15)321㎞, ('16)440㎞, ('17)540㎞

※ BOD 63% 감소('07~'15년 준공된 128개 하천), 주민만족도 91%('15년 28개 하천)

○ 이·치수 중심의 하천사업으로 사라진 홍수터의 생태적 기능 회복을 위한 **옛 물길(터) 복원 시범사업** 추진('17.2월 대상지선정, '18~'20년)

○ 기능을 상실한 인공구조물(보, 어도 등)의 철거·개량 등 **하천 생태계 연결 시범사업** 착수('17.2월 5개 지자체 선정)

□ 물순환 선도도시 본격 조성

○ **(기존도시) 5개 도시별**(광주·대전·울산·김해·안동)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국고를 투자하여 **물순환 선도도시***로 탈바꿈('17.1월~)

* 불투수 면적을 줄여 빗물의 유출량을 줄이고 토양·지하수 등에 침투효과를 높이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 가뭄·홍수에 대비하고 쾌적함을 더한 도시

※ (기대효과) 광주시 불투수 면적(%) : 조성 전 56% → 조성 후 25%

○ **(신도시) 행복도시**(6-3생활권) **설계단계**부터 최신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관계기관 공동연구('17.3월)를 거쳐 **본격 착공**('17.하)

○ 우수관거 설치시 개발사업자에게 **강우 유출량에 비례**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개선*('17.12월)

* 5개 지자체 물순환 조례, 하수도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

③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 제1호 홍천 에너지타운 성공모델화

○ 홍천강, 홍천온천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탐방객 유형별**(공무원·학생·일반인), **방문목적별**(체험·견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17.3월)

○ **유리온실**(열대식물원) 설치, **야생화단지 확대**(1.5천㎡→9천㎡) 등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주민 수익사업 지속 발굴***

* 퇴비·야생화를 활용한 화분제작·판매, 퇴비 소포장 판매 등

※ 주민 소득 : ('15)1.9억원 → ('16) 2.3억원 (26% 증가)

□ 전국 단위 친환경에너지타운 붐 조성

○ 지역의 다양한 유휴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17년 6개소, '18년까지 9개소로 확산**

〈전국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계획(환경부 소관)〉

구분	지역	주요 사업	착공	준공
시범	강원 홍천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14.10	'15.12
본사업 1단계	충남 아산	소각장 여열 발전 및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발전	'16.6	'17.12
	충북 청주	하수슬러지·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발전		
	경북 영천	슬러지 감량시설의 폐열활용 발전, 태양광 등		
	경북 경주	소각폐열을 활용 오토캠핑장 조성		
	경남 양산	가축분뇨로 바이오가스 생산·발전후		
본사업 2단계	강원 인제	소각장 여열로 발전하고 폐열을 육묘장 등에 공급	'17.6	'18.12
	충북 음성	가축분뇨·음식물류폐기물로 바이오가스 생산·발전		
	제주시	가축분뇨·음폐수로 바이오가스 생산·발전		

○ 지자체 공모절차를 거쳐 '17년도(본사업 3단계) **신규사업 5개소를 추가 선정**('17.2월)하여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

※ (예산) ('13)1억원→('14)14억원 →('15)28억원 →('16)67억원 →('17)110억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에너지화시설 기술진단, 주민참여**(SPC 설립 등), **사후관리** 등 **전과정 지원센터*** **설치**

* 한국환경공단 내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T/F('16.6월)를 확대·개편(총 16명)

□ 성공모델의 개도국 수출 지원

○ 한·중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생태마을 조성 후보지**(안휘성 화이닝현)에 바이오매스(볏짚 등)를 활용한 **시범사업 착수**('17.9월)

* 친환경에너지타운-생태마을 비교연구(韓환경공단-中환경과학연구원)('15.7~'17.3월)

○ **필리핀·베트남** 정부와 협의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고('17.5~12월) 녹색기후기금(GCF) 등 자금을 활용한 **해외진출모델*** 마련('17.6월)

* 대상국별 폐기물 발생량·성상 및 수거체계, 폐자원에너지화 방안, 투자계획 등

④ 친환경 소비 · 생활기반 구축

□ 빈용기 보증금 인상('17.1월, 소주 40→100원 맥주 50→130원,) 후속조치

○ 인상 후 동시에 유통되는 **신·구병을 신속하게 검수***하고 보증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현장인력 확대('17.1월, 전국 300명)

* 전량 회수되는 업소용은 선별생략, 가정용은 신병으로 신고된 물량만 검수예정

○ 소비자 단체와 **소매점 합동점검**('16.12~'17.1월, 4천개소)을 통해 **보증금 환불거부 사태를 방지**하고 우수 도·소매점은 포상(연2회)

○ 소비자가 어디서나 빈병을 편하게 반환하도록 **전국 유통업체 등에 무인회수기,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등 보급 확대

* 무인회수기 : 103대('16.12), 플라스틱 박스(누적) : ('16)41만개→('17)61만개

□ 생태관광을 통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 생태관광지역(제주 등) **주민협의체**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숙박분야 **전문가**(생태관광 리더)를 마을과 연계 배치('17.5월)

* 주민협의체가 협동조합 또는 자회사 설립(여행업) 등 수익활동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립하도록 자문·지원

○ 다채로운 생태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도시민, 미래세대, 외국인 등 **수요자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으로 개발('17년 5개)

* 도시민(연천·파주 등 수도권 인근지역), 미래세대(교과서 속 생태관광, 진로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외국인(DMZ 생태평화공원 등)

○ 국립공원 경관·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명품마을을 지속 확대·발전**시켜 주민 소득증진(특산물판매, 체험)과 삶의질 제고

* 조성현황(누적) : ('10)1개소→('13)10개소→('16)16개소→('17)18개소

※ 4개소(신안 영산도, 진도 관매도, 완도 상서마을, 여수 동고지마을) 분석결과 주민소득은 6배 증가(2.3억→13.6억원), 만족도는 63.6%(농어촌 평균 39%)

□ 국립공원 슬로 탐방문화 확산

○ 과밀로 인한 탐방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탐방예약제**를 확대하고 모바일 예약시스템 개발('17.8월) 및 지역협력 확대(주민가이드 등)

* 시행구간 : ('16) 3개소 → ('17) 10개소(태백산 금대봉, 설악산 곰배령 등)(누적)

○ 무분별한 탐방로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탐방로** 이용·관리체계**(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제, 휴식년제, 총량제 등)** 구축('17.5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17.5월) 등

□ 사회 전분야의 지속가능 생산·소비·생활 문화 확산

○ **(생산)** 어린이·주방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의 환경표지인증** 확대*, 50개 부품·소재 대상 **친환경공급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 생활밀착형 제품 인증기준 : ('16)55개 → ('17)60개(누적)

** 원료물질의 환경성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자·공급자의 친환경소재 사용 유도

○ **(경영) 금융기관·기업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녹색기업 등에 대한 **금융우대상품 출시*** 확대

* ('16) IBK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 → ('17) 신한은행 등 추가

○ **(소비)** 대형마트 중심의 녹색매장을 **중·소형 유통업체**로 확대·**지정***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17.12월)

* ('16) 350개 → ('17) 400개(누적)

○ **(생활) 탄소포인트제**를 가정·상가에서 **자동차 분야**(친환경운전 등)로 확대하고 **그린카드 모델**을 **중국으로 수출*** 추진('17.1월 한·중 MOU)

[과제3]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물산업, 생물산업 등 **환경 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

①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

□ 신기후체제 출범 후속조치 추진

○ 감축·투명성·탄소시장 메카니즘 등 기후변화 협상 의제별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제안서*** 작성 지원('17.5월, 국조실 총괄)

* 감축목표 산정지침, 적응보고 내용·형식, 투명성 및 이행점검 점검절차·방법 등

○ 국제 정책동향, 장기전망 등 **사전연구·분석**('16.6~'17.6월)을 거쳐 **2050년 저탄소 장기전략 수립**(~'18)

○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를 갱신·검증하고 국가 감축 로드맵과 연계하여 **시·도별 감축목표 설정*** **및 로드맵 수립** 지원(6개소)

* 지자체 감축목표 방법론·성과지표 개발('17.5월), 감축목표 수립('17.12월) 등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

○ **(발전)** 제8차 전력수급계획 협의시 미세먼지 특별대책,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합하는 친환경 전원믹스 확대('17년중, 산업부 협업)

-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주민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육상 풍력 입지의 환경성평가제도 개선**(산업부 협업)

* (기존) 사업자가 先 입지결정 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개선) 기 훼손여부, 풍력 잠재량 등을 토대로 先 사전협의 후 입지 결정

○ **(산업)** 배출권거래제 관장기관이 수행한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량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로 **등가성 및 신뢰성 확보**

* 명세서 제출(~3.31) → 적합성평가(~4.31) → 환경부 협의(~5월初) → 인증위 개최(5월中)

○ **(수송)** 소형차에 대한 **초과배출 과징금 상향**('17.1월, g당 1→3만원) 및 **대형차**에 대한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안)** 마련('17.12월)

* 3.5톤 미만 소형차는 '20년까지 평균 97g/㎞ 목표로 '16.1월부터 시행 중

○ **(상업)** 온난화 효과가 높은(CO_2의 최대 1만1,700배) **냉매의 회수·처리 대상 확대***, **냉매 회수업 등록제** 도입 추진('17.2월, 법률안 국회제출)

* (현행) 일정규모 이상 건물 공기조화기 → (확대) 산업용·냉동·냉장용 기기 추가

○ **(공공)**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감축사업 지원(9개소 18억원), **환경기초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등 설치 지원(11개소 28억원)

□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확충

○ '19년도 **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 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탑재체 개발완료**('17.9월) 및 **국가 환경 위성센터 준공**('17.11월)

○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를 기상관측자료 중심에서 **건강영향·인프라** 등 **사회경제적 영향정보**를 반영·고도화('17.11월)

○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를 대비한 **적응시설**(빗물순환시설, 쿨루프 등) **조성 지원**

* 서울(빗물순환마을), 부산·광주(쿨루프 시설), 대구(폭염 대응기반 구축) 등

○ **취약계층**(독거노인 등) **5천가구**를 대상으로 **폭염·한파 등에 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단열개선, 쿨루프 설치** 등 방문서비스 제공

② 환경 신산업 발굴 · 육성

물산업

□ 물산업 육성 전략 이행체계 정비

○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물산업 육성전략 **세부추진계획 수립**('17.6월)

○ 물관련 신기술·제품의 검·인증, 실증 및 상업화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 마련('17.12월)

* 실증시설(플랜트·관망시험구역 등 8만㎡), 물산업진흥시설 6.4만㎡ 등 총 63만㎡

○ 대·중소기업,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17.5월, 물산업협의회·KOICA·KOTRA등)

□ 기술혁신을 통한 물산업 경쟁력 제고

○ 핵심기술 국산화, 미래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물시장 수요 맞춤형 상하수도 혁신 R&D"**('19~'26년 4,500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고도처리기술(멤브레인 등), △스마트 제어기술(지능형 관망 등), △계측·분석기술(센서 등), △에너지효율(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 **발주처**가 **수요기술과 요구수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개발자와 **구매예정 계약**을 **체결·보증**하는 제도(안) 마련('17.8월)

※ 연구자 중심 R&D 체계가 아닌 시장(발주처) 중심의 R&D 체제로 전환

친환경차 산업

□ 전기차 (누적 11,767대('16말) →26,000대('17말))

○ **초소형차, 전기화물차**(개조시) 등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차 기술혁신 등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선방안 검토**('17.8월)

* 충전시간 10시간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충전시간이 긴 고용량 배터리 탑재한 차량은 불리

※ 구매혜택 : 대당 보조금 1,400만원, 개별소비세 최대 26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경

○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직장**(녹색기업),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도심권**(마트·정비센터)에 **집중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문제 해소

* 급속 ('16)750기 → ('17)2,610기, 완속 ('16) 9,258기→ ('17)20,273기 (누적)

○ **장기렌트**(서울·경기·대구 등 4천대), **카셰어링**(서울·제주 2천대), **공공기관**(2천대), **맞춤형 복지사업 차량**(읍면동 1.3천대) 등 **다량 수요처 발굴**

* 전기차 장기렌트 상품출시('17.1월), 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상향(30→50%) 및 위반시 과태료(300만원 이내) 부과('17.상반기 수도권대기법 개정)

□ **수소차** (누적 126대('16말) → 256대('17말))

○ **수소택시** 및 **카셰어링**(울산15대, 광주20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탑승기회를 제공하고 **세금감경**('17.1월~)으로 **구매수요 창출**

※ 구매혜택 : 대당 보조금 2,750만원, 개별소비세 최대 52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경

○ 부생수소가 풍부한 **울산·광주·창원** 등에 **충전소** 확충(10('16)→24기('17))

□ **하이브리드차** (누적 5만 4,000대('16말) → 10만 4,000대('17말))

○ 하이브리드차는 **연간 5만대**로 보급물량을 확대(전년비 65% 증가)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300대)는 **지원차종 확대**(3종→아이오닉·니로 등 5종)

※ 구매혜택 : 대당 보조금 100만원(하이브리드), 500만원(플러그인), 세금감경 270만원

생물산업

□ **나고야의정서 이행·지원체계 구축**

○ **(법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7.7월) 및 접근신고서(안) 마련 등 **시행 사전준비**('17.12월)

○ **(산업계 지원)** 중소 바이오기업 **맞춤형 컨설팅**('17년 20회, '16년까지 총 82회), 동영상 **교재 개발**('17.12월) 및 **HelpDesk 운영**(연중)

□ **고유 생물자원 발굴**

○ '20년까지 생물자원 6만종 확보를 목표로 **국내 자생종 1,600종을 발굴*하고** 효능·유용성분 분석('17년까지 누적 970종)

* 누적 발굴건수 : ('12)39,150종 → ('15)45,295종 → ('16)47,003종

○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생물정보 **통합 DB 운영개시**('17.1월) **및 정보연계 확대***(빅데이터 검색서비스 구축 등)

* (현행) 국립생물자원관 → (개선) 특허청·유관기관 등 14개 기관 연계 확대

□ 생물소재·바이오제품 개발지원

○ **유용자원 발아·배양·증식 원천기술을 개발**('17년 24건, 11억원)하여 **국내 바이오기업에 제공,** 수입소재 대체* 및 자생원료 제품개발 지원

* 생물소재 대체 : ('15)막걸리종균(일본)→토종종균, ('16)소화제(중국)→현호색, ('17)친환경 말벌 독 백신(기술이전 예정)

○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기업·대학 등 **수요자 맞춤형 생물소재 제공***

* 분양실적(점,누적) : (~'11)28 → ('12)82 → ('15)2,013 → ('16)3,546 → ('17)5,066

○ 지역별로 다양한 생육환경의 **재배지를 확보**하여 **대량증식기술**을 개발하고('17년 20종), **특허출원** 및 **민간이전 지속 추진**

* 특허 출원/등록 현황(누적,건) : ('13)11/4 → ('16)86/24 → ('17)114/미정

기상산업

□ 기상·기후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 사용자 중심의 **기상자료개방포털 기능 개선***('17.2월) 및 실시간 기상 빅데이터 자료의 **오픈 API 서비스 확대****(7종→9종)('17.7월)

* 지도기반 서비스, 대용량 분 단위 관측자료 제공 자동화, 다운로드 기간 확대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기상특정보, 지진정보 추가 제공

○ 기상·기후분야 수치예측자료 응용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구기관 대상의 대용량 수치예측자료 분할 제공 서비스 실시('17.5월)

□ **기상정보 활용 인식 제고 및 신규 수요 창출 극대화**

○ **날씨경영 우수기업 확대*** 및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날씨경영 컨설팅·교육,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실시(연중)

* 날씨경영 우수기업(누적) : '12년 43개 → '16년 175개 → '17년 250개

○ 유관기관(보험개발원, 손해사정사회, 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력을 통한 **신규 날씨보험상품 개발 추진** 및 기상감정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기상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보험 상품 개발 및 적용방안 기획, 기상감정사-재해보험 종사자 협의체 구성·운영

③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 **전주기 연구관리 혁신방안 마련**

○ 정성적 **Peer-Review** 확대, **책임평가위원제*** 도입('17.2월) 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정사용 방지

* 선정평가위원 중 일부가 결과 평가까지 참여

○ **셀프기획 차단**을 위해 후보과제 제안서(RFP)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제3자 또는 민간 전문가**들에 의한 과제 **타당성 검토** 추진

□ **문제해결 및 수요자 중심 R&D 추진**

○ **미세먼지·녹조 등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Post-2020*) 환경기술개발 투자전략 수립('17.4월)

* 글로벌탑 등 현행 환경기술개발사업 대부분이 '20~'21년에 종료

○ 우수 기초원천기술은 응용기술과 실증기술 연구로 순차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성과 극대화**

※ 기초원천→응용(Eco-Bridge, 24억원), 응용→실증(실증릴레이, 18억원)

□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체계 구축

○ **미래 환경산업펀드***('17년 정부예산 200억원 출자)를 조성하여 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환경기업을 지원

* '17~'21년간 약 5,000억원 규모 펀드(정부, 민간 자금 포함) 조성, 4년간 투자, 4년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 환경 신기술의 실증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환경산업 연구단지 준공**('17.5월, 인천시 18만㎡)

□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수원국,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하여 **정부와 민간이 직접 사업 개발·투자·운영**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17년 12억원)

* 인도네시아(바이오매스 등 폐자원에너지화), 필리핀(토양오염복원), 이란(대기오염방지, 폐자원에너지화) 등 약 20건의 사업 발굴 중

○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환경개선 및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중국 10개 성(省)과 우호 협력관계**** 구축

* '15~'16년 8개사업(800억원) 수주(산동·하북·산서성 등) → '17년 요녕성·내몽고 확대

** 한중 환경협력실무위원회 구성 : ('16) 4개성(산동성·섬서성·광동성·하북성) → ('17) 3개성(산서성·요녕성·내몽고) → ('18) 3개성(사천성·강소성·호북성)

○ 대상 국가별 **수요 맞춤형*** **시장개척단**(민·관합동)을 파견하고(5회) **프로젝트 정보를 DB화**('17.1월~)하여 민간기업이 사업수주시 제공

* 중남미(폐기물·수처리), 중동(상하수도), 아시아(수처리·폐기물 등)

□ 해외진출 전과정 지원체계 강화

○ **수출종합지원센터**('16~,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수립, 벤더등록, 무역·수출 실무, FTA 자문 등 **전과정 컨설팅*** 지원

* '16년 FTA자문(15건), 무역실무(13건), 법률(12건), 벤더(3건), 전략수립(1건) 등 총 88건 전문 컨설팅 실시 / '17년 FTA자문 20건 등 100건 목표

○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지정**('17.6월)**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적(레퍼런스) 미비로 인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 다수의 환경기업 **공동으로 수출 성과와 실적**(레퍼런스)을 **축적·공유**하여 해외진출 장벽해소, 지속가능 사업 구조 구축

④ 노후 환경 인프라 현대화

□ (재정사업) 조치가 시급한 20년 이상된 노후·위험관로 정비

○ **(노후 상수도)** 가뭄·수질오염 문제 등 해결을 위하여 22개 군 지역(745㎞)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 착수('17.1월)

※ '17~'28년간 총 3조 962억원(국고 1조 7,880억원, 지방비 1조 3,082억원) 투자)

- 원가절감 등 **지자체의 상수도 경영개선 계획 및 성과**에 따라 '18년도 사업에 국고 보조율 차등(50~70%) 적용('17.8월)

○ **(노후 하수도)** 지반침하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파손 관로 교체·정비('17년 95개시군 500㎞)

○ **(도심침수예방)** 침수 우려지역 10개소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16년까지 53개소)하고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 ('16) 3개소 → ('17) 8개소 (하수관 키우기,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 (민간투자사업) 환경SOC 분야 민투사업 발굴·확대

○ 하수처리용수 재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13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민투사업(BTO) 추진**('17년 616억원)

* 공공 폐수처리시설 6개소, 하수처리장 4개소, 하수재이용시설 3개소 등

○ 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분야 신규 민투사업**(BTL 등) 활성화 방안 마련('17.5월)

[과제4]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환경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피해구제제도('16)) 첫해 연착륙에 이어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환경책임보험('16.7월 출시) 가입률 98%
◈ (통합관리제도('17)) 안정적 시행으로 산업계 환경경쟁력 제고
◈ (자원순환제도('18)) 산업계 협업을 통한 제도 시행기반 구축
◈ (화학안전제도('15))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화학사고 감축

①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

□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

○ 보험 가입시점 조정, 의무가입 대상시설 조정, 해양시설 위임규정 신설 등 **법·제도 합리화 추진**('17.6월)

* 가입시점을 현재 시설 '인·허가시'에서 '가동개시 신고시'로 조정
* 적용기준 미만 소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
* 해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

○ 신규 유해화학물질, 업종·업태 등을 고려한 **책임보험료 산출체계**(보험요율)를 **개선***하고, **다이렉트**(On-line) **가입시스템 개발**('17.6월)

* 폐기물 분야 보험요율 구분(재활용/소각·매립), 다이옥신 배출시설 재분류(대기→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할인할증요율 확대(10%→15%) 등

□ **환경책임보험 시장 활성화**

○ 공동방지시설 운영자와 배출자 **단체계약 상품**, 사업장 규모에 **특화**된(발전,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사업장 등) **보험 상품 개발 추진**('17.4)

○ 환경피해의 손해액 사정, 시설의 위험도 평가 등 **환경책임보험료 산출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환경손해평가사**(가칭) 신설 추진

* 국가자격 신설을 위한 직무분석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 착수('17.9월)

□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 운영기반 마련

○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 운영방안*** 마련 검토('17.6)

*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항목,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체계 등

- 정부가 수행한 건강영향조사 등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진폐증, 중금속중독증 등)에 대한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17.7~12)

□ 환경오염책임 보험제도 운영 활성화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세부 업종·업태 등을 반영**하여 환경책임 보험 산출체계(보험요율 등) 개선('17.4월)

* 폐기물분야 보험요율 조정(재활용/소각·매립으로 구분), 다이옥신 배출시설 재분류(대기→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할인·할증요율 확대(10→15%) 등

②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

□ 통합환경관리제 본격 시행('17.1월)

◈ (적용기준) 대기 1·2종, 수질1·2종 등 총 1,314개 사업장
◈ (시행업종) '17년 3개(발전·소각·증기생산), '18년 3개(철강·비철·유기화학) '19년 4개(정유·비료·화학·무기), '20년 3개(펄프·기타종이·전자), '21년 6개(기타)

○ **(간편한 허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중복된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70여종의 서류를 **간소화**

○ **(맞춤형 기준)**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적가용기법** (BAT)을 적용하고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 지역별 환경오염 현황지도 제공,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운영개시('17.1월)

○ **(효과적 관리)** 단속·처벌위주의 중복적 지도·점검을 통합하여 기술진단·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기술지원체계 구축

□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지원 서비스 제공**

○ 통합환경관리 **콜센터를 설치·운영**('17.1월, 환경공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25개소, 2억원)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배출영향분석, 허가배출기준(안) 등

○ 인체·환경에 미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론 교육**, 배출시설 등의 환경관리기법 조사 등 사업장별 저감 기술진단('17.5월, 30개소)

○ **사업장 환경관리인**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설('17.3월), 권역별 순회설명회(반기 1회), 홍보자료 배포 등 제도 연착륙 유도

* 법정교육 약 30회,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교육 2회(반기 1회)

□ **2단계 시행업종**('18년 철강·비철·유기화학) **통합허가 사전준비**

○ 업종별 **기술작업반**(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토 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배포**('17.12월)

○ 대상업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시범작성** 지원('17.7월), **통합허가시스템 모의허가 신청**('17.11월) 등 사전 이행점검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

□ **자원순환 관련 법령 정비**

○ 감량·재활용·매립제로화 등 자원순환 촉진수단별*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하위법령(안) 마련('17.3월), **연내 입법완료**

* 순환자원 인정 및 품질표지기준, 순환이용사업자 대상범위, 매립·소각 부담금 세부요율·산출기준, 사업장별 자원순환목표 설정·관리기준 등

○ 다수 법령에 혼재되어 있는 자원순환 원칙*과 기준을 자순법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법으로 통합**('17.10월, 법안 국회제출)

* 감량 → 재사용 → 재활용 → 폐자원에너지화 → 안전처분(소각·매립 등)

□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관리제 시행('18)에 대비하여 **업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 ('15) 3개소(전년대비 최종처분율 5.7%, 순환이용률 83.4%달성) → ('16) 4개소 → ('17) 4개소(개선된 최종처분율·순환이용률 목표 설정)

○ **중소 재활용업체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 경영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고(100억원), 재활용산업 **융자확대**(('16)1,036억원→('17)1,329억원)

* 저유가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하락한 폐스티로폼·폐지·고철·폐비닐류 등 (고철 305원/kg('13)→96원/kg('16.2), 압축페트병 500원/kg('13)→281원/kg('16.2))

□ 자순법 시행대비, 직매립 제로화 기반 구축

○ **매립·소각 부담금** 세부요율 및 부과·감경기준을 마련('17.3월)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세부 제도운영지침 개발**('17.10월)

* 지자체·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등 100여개소 대상 모의적용('17.6월)

※ 부담금 부과·징수, 자료검증을 위한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시스템 구축('17.12월)

○ 종량제 봉투에 포함된 **유용자원**(약70%)을 **추가적으로 분리·선별**하여 고형연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매립장에 전처리시설 확충***

* ('13) 10개소 →('16) 13개소 → ('17) 14개소(누적)

○ 부담금 도입시 증가가 예상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선별·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공공 재활용선별장 확충***

* ('16) 11개소(67억원) → ('17) 17개소 운영(101억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수거체계 개선

○ 저유가, 수요감소 등으로 침체된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하여 **재생제품 가격, 재활용 비용 등과 재활용분담금 연동방안** 마련('17.10월)

○ **수거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종이팩·형광등·전지류 등 재활용품에 대하여 맞춤형 수거체계 **보완대책 마련·시행**(2/4분기부터 순차시행)

④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정비

○ **늑장신고**로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 신고규정(15분내) **3회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제도(삼진아웃제) 도입('17.6월)

○ 노후된 **화학사고 대응장비**(5종 33점)와 **차량**(7개)을 **교체**하고, 화학영상탐지시스템·누출탐지장비 등 93점 신규 도입('17년 34억원)

○ 기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사고원인 및 유형별로 **특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 대응훈련** 지속실시(연2회)

* ('17) 화재·폭발 → ('18) 누출·유출 → ('19) 실험실·운송차량 등

○ 반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노후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중점점검('17.6월)

○ 부처별로 산재된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사고영향 및 방제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17.6월)

* 제공 사업장 : ('16)13.6만개→('17) 20만개소, 물질정보 : ('16)1.8만종→('17)2.5만종

□ 산업체 화학법령 이행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정보·노하우, 방재장비 등을 공유**하고 사고예방 컨설팅을 제공하는 **화학안전공동체*** 운영 확대

* ('15) 56개, 431개사업장, ('16) 76개, 585개사업장, ('17) 85개, 600개사업장

○ 보호장구 착용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사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업상황별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7.6월)

○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표시제도, 취급시설 기준 및 검사주기, 안전관리계획서** 등 부처별로 중복·상이한 안전제도를 **표준화**

* 고용부·산업부·안전처 합동T/F 구성('16.12월), 개선방안 마련('17.상반기)


MINISTRY OF ENVIRONMENT
환 경 부